

격월간
정세와 동향

제7호

[2013_04_08]

모심의 살림의 노 길

이슈 진단

불량한 식품과 전쟁에 나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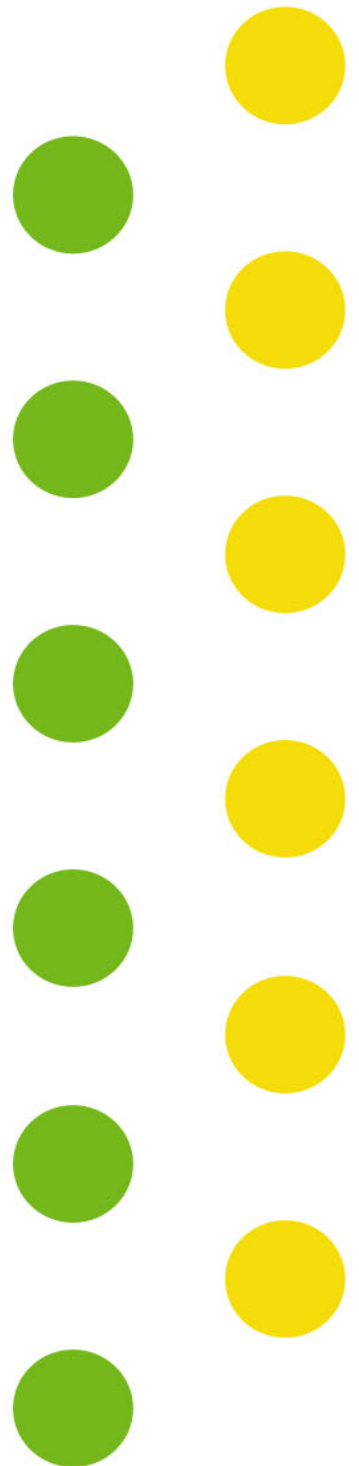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경제·생활 | 사회·환경 | 정치·사회운동

살림의 말

‘성장’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경제 성장, 생협의 성장, 인류의 성장을 생각하며”



- 목 차 -

이슈 진단

- 불량한 식품과 전쟁에 나서다? 1

분야별 동향

[농업 · 먹거리]

- ‘식물공장’은 과연 생명의 먹거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8
- 토종농산물과 토종씨앗 보존에 나선 지자체들의 노력 11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한 세계사회포럼과 농민들의 목소리 11

[경제 · 생활]

- 협동조합의 활발한 설립과 다양한 지원 체계의 등장 13
-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의 향후 10년을 위한 청사진’ 발표 14
- 확장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협동조합의 역할 15
- 독일의 에너지 전환 노력과 협동조합의 참여 17
- ‘팔불출’에서 ‘요남자’(요리하는 남자)로 변신하고 있는 남성들 19

[사회 · 환경]

- 물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상업화 논리와 대안 모색의 필요성 21
-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주는 불안감과 시민들의 대응 노력 22
- 탈핵 사회를 향한 에너지 전환 노력들 24

[정치 · 사회운동]

- ‘안보불감증’에서 ‘평화감수성’으로 27
- 제2의 새마을운동과 협동조합의 관제화 또는 정치화에 대한 우려 29
- 내가 사는 곳은 어디인가? 행정구역개편과 지역주권 30
- 추첨제를 적용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녹색당 대의원대회 32
- 인도의 총파업과 한국의 고공농성,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34

살림의 말

- ‘성장’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36
‘경제 성장’, ‘생협의 성장’, ‘인류의 성장’을 생각하며

이슈 진단

불량한 식품과 전쟁에 나서다?

● 갈수록 커지는 먹거리의 불안감 속에 정치 현안으로 등장한 불량식품 문제

- 우리나라 국민의 1/3이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내산보다 수입식품에 더 불안해하고,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증가가 불안감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 작년 말에 발표된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의 33.4%가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함.¹⁾
- . 응답자들은 '식품업체의 의식 부족'(42.8%)과 '정부의 관리 미흡'(37.0%)을 주요 불안 요인으로 들면서,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41.0%)와 '식품안전 기준 강화'(32.8%)를 주요하게 들고 있음.
- . 또한 국내산보다 수입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크며, 특히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국내산(37.5%)보다 수입산(77.5%)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
- . 한편, 식품안전과 관련해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주요 요인으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증가'(38%)를 가장 크게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식품위생관리 미흡', '생산지 오염', '수입식품 증가'를 들고 있음.²⁾
- '불량식품' 문제가 위생 및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사회 불안과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
- . '먹는다는 것'에는 영양분과 칼로리 섭취 같은 생물학적인 차원은 물론,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치유하는 사회문화적인 차원까지 함께 담겨 있음.
- . 그런데 생명 유지에 기본이 되는 먹거리가 신뢰를 잃고 건강을 해치는 '불량'한 식품이 되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빈발해지고 있음.
- . 흔히 위생 상태나 품질이 좋지 않은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불려왔으나, 최근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식품 전반을 불량식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강력히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즉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신체의 건강에 해를 주는 식품은 물론이고,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하고 불

1) 통계청, 2012, <2012년 사회조사 결과>(12. 20.)

2) 경기개발연구원, 2013, "안심 식탁을 위한 먹거리 정책방향", <이슈&진단>, 제82호(2. 13.)

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식품 모두가 불량식품이라는 것임.³⁾

- 따라서 불량식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사용 금지 원료나 물질을 포함한 식품', '원산지나 중량, 성분, 배합비율, 제조사, 가격 등을 허위로 하여 판매하는 식품', '위생 등 정해놓은 기준이나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곳에서 생산, 판매되는 식품' 등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됨.

- 사회악(惡)으로 지목된 불량식품 추방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로 등장

- 작년 12월 대선을 앞둔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국민의 안심과 행복을 위협하는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지목하면서 불량식품이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됨.
- 당시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불량식품 발언을 '말 실수'로 보고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먹거리 위해(危害)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사회범죄'로 인식한 박 후보의 공약은 특히 살림살이를 하는 여성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냈음.
- 이것은 과거에 비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으나 생명 활동과 직결된 먹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불안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결국 선거 승리로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심프로젝트' 차원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에 이룸.

- 최근 중국에서도 식품안전이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식품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던 중국에서도 올해 들어 식품안전 문제를 정치 및 사회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함.
- 지난 3월 초에 열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에서는 전국에서 온 인민대표자(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이 식품안전 문제를 주요 해결 과제로 제기하였고,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SFDA)을 만들어 국무원 직속에 두기로 함.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기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식품생산 규제 부서'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식품시장 규제 부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집행부서' 기능을 넘겨받아 권한을 대폭 강화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3년 업무계획> 보고자료(3. 20.)

●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에 기반한 식품안전 문제 해결 대책들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기구로 승격, 출범시킴

- 정부는 식약청 시절 '식품안전국'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 등 3개국으로 확대 개편함. 즉 영양·급식 등 식생활의 변화 추세를 반영해 '식품영양안전국'을 신설하고, 농식품부에서 이관 받은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안전국'을 만듦.
- 또한,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예방정책국'을 '소비자위해예방국'으로 개편하고, 홍보와 심리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소통협력의 민관합동 조직을 신설함.
- 식약처에 임시조직으로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설치하고,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조직과 기능도 강화함.

-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5개년 종합대책과 세부시행 계획 수립, 관계부처 추진상황 점검회의의 주기적 개최.
- 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교육부(학교급식), 농식품부(농축산물), 안행부(지자체협조), 관세청(수입물품), 경찰청(수사) 등 범정부 대책을 총괄 조정함.
- 국무총리실, 식약처,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이 참여하는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킴.

-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강화

-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자체의 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사범처리 업무의 연계성 강화.
-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고의적 식품범죄사범의 영구퇴출, 불량식품 제조·판매자에게 이익의 최고 10배까지 환수조치.
-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과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점 등에서의 식품 판매행위 금지.

- 식품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와 위해 요인 신고 체계의 일원화

-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추진단' 구성 등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부처 공동 활용망

4)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3년 업무계획> 보고자료(3. 20.) 참조.

구축(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농림축산부, 관세청,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약처장이 직접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오염된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불량식품신고 전화(1399) 운영체계 개선 및 일괄상담 접수 창구 마련.

- 온라인 식품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그동안은 인터넷에서 불량식품 유통이 적발되더라도 판매업자만 제재를 받고 판매 중개업체들은 책임지지 않았으나,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사(옥션, G마켓 등)와 구매대행 사이트(포털 블로그 등)를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서, 판매된 식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구매대행 사이트 경우 그동안은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구매대행 사이트 등이 해외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임.

-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시민의 참여 역할 강조

-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소비자·업계·언론 등이 참여하는 불량식품근절 캠페인과 공익광고, 어린이·학생·주부를 대상으로 한 불량식품 안 사먹기 운동 전개.
- 시민 감시 활동: '시민감시단' 구성과 식품위생 감시 활동.
- 시민 제안 및 신고 활성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민안심제안센터' 설치, 위생 점검 요청 기준 완화(소비자 5인 이상, 소비자단체장도 점검 요청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
- 식품위생 환경 개선: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100% 근절.

● 정부가 주도하는 불량식품과의 전쟁과 우려의 시선들

- 단속과 처벌 중심의 불량식품 추방 조치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식약처가 학교주변 200m 외에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을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하자, 대형마트에 밀려 생계가 어려워진 학교주변 문구 소매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섬.
- 문구 소매점들의 반발로 식약처는 식품 진열대를 설치하고 위생 관리를 엄격히

해서 우수업소로 지정된 문구점에서만 식품을 팔 수 있도록 대응책을 내놓았으나 갈등의 불씨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관련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식품유해환경보다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과 규제보다 학교 차원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실시가 더 필요한 실정임.

- 정부의 불량식품 규제와 식품안전 관리 기준 강화 조치로 자본과 시설, 기술력이 열악한 영세 식품가공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 2011년 기준으로 식품업체의 92%가 종업원 10인 이하인 영세 사업장인 반면, 종업원 51인 이상인 업체가 3.4%로 전체 매출의 74.2%를 점유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정부의 규제 강화는 추가 시설투자 여력이 없는 영세 업체들에게는 경영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위생상태가 열악한 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나, 시장에서의 퇴출보다는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정해진 공정을 거쳐 생산된 같은 제품이라도 대기업에 비해 홍보와 마케팅 역량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에게 '저가식품 = 불량식품' 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중소 가공업체들의 통합적 홍보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임.

● 식품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

- 공권력을 동원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 노력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2008), 식품안전정보원 설립, 식품위해사범조사단 신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2009) 등 법과 제도를 통한 식품안전 관리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던 만큼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 정권 초기인 현재 각 지역별로 지방경찰청이 중심이 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불량배 소탕 작전'과 같이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 가족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못지않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함.
- 정부가 계획하는 오염업체 감시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들 스스로가 식생활 전반의 개선을 위한 주체적 참여자로 나설 필요가 있음.
- 관련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

도록 먹거리 안전성을 포함한 식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교육프로그램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와 여성일수록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상별로 식품안전에 대한 민감도에 따른 교육과 홍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식품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식약처가 독립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못지않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 식약처가 국민건강 지킴의 공적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나갈 필요가 있음.
- 먹거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이자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형 식품가공업계와 유통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수입식품의 경우 규제에 따른 외교통상 압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여기에서 농업 생산과 식품의 산업화와 관련한 정치권 및 과학기술계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이런 상황에서도 식약처는 정치와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공적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광우병 수입 소고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처럼, FTA 체결 확대를 통한 정부의 자유무역 기조와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 문제, GMO와 방사능오염 식품의 취급 문제와 통상마찰 등 앞으로도 식품안전 및 국민건강을 위한 가치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이때 식약처가 어떤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역할을 해나가는지가 신뢰 확보의 기준이 될 것임.

- 식품안전을 포함한 먹거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직거래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틈새를 벌려놓고 그 사이를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한 경쟁논리로 채워 넣는 것이 특징임. 이런 현실에서 먹거리는 돈벌이 대상으로 바뀌고 불량식품의 양산과 먹거리에 대한 안전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
-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자신들의 먹거리를 직접 길러 조리해 먹는 것이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는 현실에서, 생산과 소비 주체의 손을 떠난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봐야 할 것임.

- . 특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존한 규제와 감시, 처벌의 방식을 넘어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새롭게 잇고 튼튼하게 하는 '직거래 운동'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마침 직거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대안적인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사업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음.
- . 하지만 지금과 같은 먹거리 위기 시대에 직거래는 단순히 경제적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직거래는 생산과 소비의 단절된 관계를 극복하고 서로 살림의 관계로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실천 양식이라 할 수 있음.
- . 따라서 직거래는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공간(물리적) 거리'를 좁혀 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 '사회(심리)적 거리'를 좁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놓은 생산과 소비 간의 대립적 관계를 상호 신뢰와 협동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음.
- . 관련해서 먹거리 안전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거래 운동의 길을 앞서 걸어온 한살림의 노력과 경험들을 사회적으로 공유,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직거래 운동을 통해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함께 살피고 돌보는 운동을 펼쳐 온 한살림은 도농교류 활동, 식생활교육활동 등 그동안의 활동 경험들을 바탕으로 먹거리운동을 사회와 함께 펼쳐나가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뿐만 아니라 먹거리 안전을 법과 제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민간 자율적인 노력으로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나누어 온 한살림의 활동 의미도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임. 특히 현재 한살림이 펼치고 있는 자주기준, 자주관리, 자주점검 노력은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의 실천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나아가 식량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먹거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노력으로서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 식량자급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분야별 동향 1

농업 · 먹거리

● '식물공장'은 과연 생명의 먹거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 최근 들어서 '식물공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 자연계 생명체로서 '식물'과 근대적 산업의 상징인 '공장'의 합성어인 '식물공장'은 말 그대로 잘 관리된 인공 환경과 계획된 공정에 의해 먹거리인 식물을 공장의 제품처럼 생산해 내는 것을 말함.
- . 식물공장은 IT와 BT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농업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신 과학과 기술을 통해 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적 환경을 만들고 최종 생산물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과 생산량까지 종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음.
- . 최근 들어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농업의 미래이자 대안으로서 식물공장에 대해 주목하면서 식물공장 설립과 지원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음.
-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식물공장'을 미래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예산 중 우선 30억 원을 식물공장 시범 지원에 배정하고, 폐교나 유휴 농지 활용 등 공장시설 기반을 위한 무상임대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 서울시는 2010년부터 솔트웨어와 식물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노원구의 식물공장은 상추와 치커리, 선인장, 허브, 딸기 등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세움.
- .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광주시 등도 식물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업유치를 지원할 예정임.
- . 경북 테크노파크는 농촌인구 고령화, 자유무역협정(FTA),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귀농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등 미래농업의 혁신 산업으로 농촌형 식물공장 창업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밝힘.
- . 농촌경제연구원의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의 새로운 범위로 식물공장을 규정하고 정부보조금은 물론 기업유치 촉진, 규제 완화를 통한 농지사용허가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 식물공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대한 우려와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식물공장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쪽에서는, 시장경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식물공장을 통한 규모화와 효율화로 농업인 소득과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식물공장이 기여할 수 있으며, 농약 등 위해물질의 차단으로 농업의 친환경성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즉 LED 전등과 배양시설 등의 인공적 제어를 통해 식물성장에 필요한 빛과 온도, 습도, 영양성분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자연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으로 계획에 따라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식물공장의 장점이자 특성으로, 식물공장에서 생산되는 엽채류는 일반 노지 재배와 비교해 생산성이 10~20배에 달하고 농약 사용 없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임.
- 하지만, 식물공장이 내세우는 경제성과 친환경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음.
- 우선, 식물공장이 기후변화의 대안이기보다는 오히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에너지집약형 시설이라는 비판이 있음. 예를 들어 식물공장은 LED 인공조명으로 채소를 키우는 데 100평 기준 매달 3~4만kw의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3kw짜리 온풍기 1만 개가 필요한 규모라는 것임.
- 식물공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과다한 시설운영 비용은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 자체에도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음. 식물공장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경우 첨단 설비에도 에너지 사용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국내 유기농 상추 경우를 보면 평균 가격이 kg당 1만원 이내(2013년 한살림 가격 7,000원)로 시설상추와 가격 차가 크지 않은 반면, 국내 식물공장 상추 1kg의 생산비는 시설상추 대비 약 14배에 달해 가격경쟁력 등 경제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식물공장이 식량자급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식물공장은 먹거리 일부인 엽채류 및 일부 과채류에 적용되는 수준이어서 식량안보와 직결된 곡물류는 해당사항이 없는 만큼 식량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정도는 낮다고 함.

- 동부팜한농의 식물공장 진출 시도와 좌절,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

- 동부팜한농은 농약회사인 한농,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한국청과, 음료수가공업체인 가야, 그리고 종자회사인 몬산토코리아를 인수하고, 친환경방제업체인 세실을 합병하면서 간척지인 화옹단지와 새만금에 대규모 농업회사로 등록함으로써, 종자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하는 국내 최초의 기업이 됨.
- 이런 동부팜한농이 유리온실을 완공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대량 생산해 수출할 계획을 밝히자 시설원에 농민들이 격렬하게 반대에 나섬.

- . 이에 동부는 토마토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농협과 농민단체 회원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참여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농민들이 한농 농자재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일부 농협 매장이 이들의 농자재 판매를 중단하자 마침내 해당 사업을 철회하기에 이름.
- . 이번 동부팜한농의 경우 경제적 효과와 사업성 논리로 식물공장 진출을 시도하다가 반대로 인해 철회된 사례이나, 농업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식물공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관련 기업들의 참여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생산자 농민단체들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농업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식물공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
- . 식물공장의 먹거리가 농약을 치지 않았다고 친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지, LED 조명으로 광합성을 하고 땅이 아닌 합성 배양액에 의지해서 자라는 식물공장의 생산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건강한 생명의 먹거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식물공장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임.
- . 식물공장은 비록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정체성을 뒤흔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자연 환경의 변화나 생태계 순환질서와는 무관하게 통제된 인공환경 속에서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식물공장의 농작물 생산 시스템은, 농업에 대한 인식 체계를 바꿔낼 뿐만 아니라, 농업의 중심 주체를 생산자 농민이 아니라 화학, 생명공학, 에너지, 건설 분야의 기술자와 기업들로 이동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
- . 이런 가운데 땅과 분리되고, 생태계와 공생하지 않으며, 농사를 돌보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형 농업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구체화 되고 있음.
- . 최근 들어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등은 '반생태적 식물공장 대책위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대책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음.
- . 이들은 '땅에서 짓는 농사 대비 15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농사, 멀쩡한 햇빛을 가리고 전기를 낭비하며 인공조명으로 키우는 농법, 도시에서 평당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방식'은 대다수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가 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함.
- . 먹거리를 생산환경과 생산주체, 생산과정과 분리해서 영양성분과 칼로리를 중심으로 한 '식품'으로만 바라 볼 경우 농업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 이런 때에 생산자 못지않게 먹거리의 최종 이용자인 도시 소비자들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깊은 이해가 중요함.
- .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될 수 없으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활동해 온 한살림운동의 기본 정신을 확인하고 사회화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토종농산물과 토종씨앗 보존에 나선 지자체들의 노력

- 현재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에서 토종농산물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북도가 토종씨앗 보존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
- . 전라남도는 2011년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현재 농작물 6품목(25품종), 수산물 5품목(5품종), 임산물 2품목(2품종)을 지원하고 있음.
- . 제주도는 농업기술원이 토종씨앗 실태조사를 지원해왔으며, 2012년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규칙을 논의하고 있음.
- . 경상남도는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가장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메벼, 쥐눈이콩, 동부 등 34개 품목의 토종종자를 무상으로 분양하고,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차원의 토종농산물 매뉴얼을 제작하였음. 일년생 11종(토란, 메밀, 울무, 조, 수수, 기장, 검정깨, 쥐눈이콩, 속청, 동부, 이팔), 다년생 14종(도라지, 연, 민들레, 돌미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량작물로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 . 경상북도는 농업자원관리원 주관 하에 토종종자 생산 증식포를 운영하여 토종종자를 유상으로 분양하고 있음.
- . 경기도는 토종종자 유전자원 육성·보존사업으로 씨드림이 주최하는 토종종자 수집, 전시, 증식, 보존 및 토종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 전라북도는 농업기술원이 토종농산물 전시포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한 세계사회포럼과 농민들의 목소리

- 아랍 민주화의 불씨를 당긴 튀니지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세계사회포럼이 열림
- . 제13회 세계사회포럼(WSF)이 튀니지에서 개최되어 127개 국 환경·여성·노동·청년 단체와 농업 등 5천여 개 조직의 5만여 명이 참여함.

- . 세계사회포럼은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에서 발전한 것으로, 자본가들이 중심이 되어 매년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한 대안으로 2001년에 브라질에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를 가지고 처음 개최됨.
 - . 이번 포럼에서는 중동의 “아랍의 봄”,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미국의 “점령하라”(occupy) 운동 등 지구적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단체들이 참여해 국제적 사회운동의 의미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음.
 - . 이번 포럼의 폐막과 함께 발표된 선언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제도(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반대’, ‘기후정의와 식량 주권 옹호’,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평화에 대한 지지와 전쟁 및 군사화 반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미디어 역할’ 등을 담고 있음.
 - 이번 세계사회포럼에는 국제농민운동단체인 비아캄페시나가 참여하여 땅, 씨앗, 물, 시장 등에 대한 소농의 자원과 권리 보호를 강조함
 - . 비아캄페시나를 비롯해 포럼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지수탈을 중단하라, GMO 종자를 거부하자, 식량주권을 발전시키자!”는 구호와 함께 농업과 먹거리를 기업과 시장의 수탈로부터 지킬 것을 주장함.
 - . 행사가 열린 튀니지에서 민주화 바람 즉 ‘아랍의 봄’이 시작된 것도 거리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던 한 튀니지인이 생산물 몰수에 저항하다 시 당국의 강압에 따른 고통과 굴욕감으로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인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짐.
 - . 비아캄페시나는 먹거리, 경제, 기후의 삼중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량주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지수탈에 대한 투쟁과 국제연대 강화, GMO 등 제2의 녹색혁명에 대항하는 농민의 투쟁, 소농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FTA 종단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등을 주장함.
 - .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소농의 권리 보호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 “만약 우리가 기업체의 씨앗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식량 주권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식량주권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치적 주권을 잃는 것이다.”

분야별 동향 2

경제 · 생활

● 협동조합의 활발한 설립과 다양한 지원 체계의 등장

- 지난 100일간 약 500여 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됨

- . 작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이어져 3월 10일 기준으로 일반협동조합 474건, 사회적협동조합 7건이 설립됨.
- . 지역별로는 서울(116건)에 이어 광주(85건), 경기도(48건)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동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 사회적 약자,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적협동조합도 교육, 농림, 고용 등의 분야에서 7개가 설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 기획재정부는 4월 8일부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함.

- 서울시도 '협동조합 도시 서울'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반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시민인식 개선, 협동의 가치 확산 등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함.
- . 박원순 시장은 향후 10년간 협동조합을 8천 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특히 양극화 해소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공성을 갖춘 7개 분야, 즉 공동육아, 돌봄, 보건의료, 주택,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 7대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임대 보증금 최대 1억, 사업비 최대 8천만 원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을 밝힘.
- . 이 외에도 작년부터 지하철 등에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한살림서울을 포함한 4곳에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을 지원해 왔으며, 신협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동조합 도시 서울'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 .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호 경험을 나누고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목적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3월 2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 . 기존의 행정협의회와 달리 사회적경제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모여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임.
- . 협의회는 앞으로 사회 책임 조달 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방향 제언 및 공감대 확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공유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임.

●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의 향후 10년을 위한 청사진' 발표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협동조합의 향후 10년을 위한 청사진'(일명 '2020 비전')을 선포함

- . ICA는 1895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의 연합체들이 가입하고 있음.
- . 지난해 'UN이 정한 국제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ICA는 당면한 지구적 차원의 경제·사회·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지구적 협동조합 운동을 위한 전략적 의제를 담은 '협동조합의 향후 10년을 위한 청사진'(일명 '2020 비전')을 선포함.
- . 이 문서는 2012년 10월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ICA 특별총회에 제출되어 여러 논의와 보완을 거쳐 2013년 2월 총회에서 승인됨.

- ICA '2020 비전'의 주요 목표와 5가지 전략

- . '2020 비전'은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리더로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델이 되는 것', '사업의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 이를 위해 다음 5가지 전략을 의제로 삼아 목적과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음.
 - ▶ 첫째, "조합원 참여를 향상시키고 협치를 발전시킨다."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모범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며, 현재의 활동을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둘째, "협동조합을 지속가능성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한다."
특히 경제, 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를 활용한 사회

적 회계를 도입하고 협동조합 사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통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 셋째, “협동조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정체성은 협동조합 내부를 위한 것이지만 메시지는 바깥과 소통하는 통로임.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 원칙은 최소한의 가이드임. 또한 소통을 위해 공동의 심볼을 활용하거나 협동조합 교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 넷째,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 제도를 확립한다.”
국가적으로 적절한 협동조합의 등록과 규제 환경이 중요하며, 정체성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거나 협동조합의 사회적, 공공적 기여에 대한 출판이 필요함.
- ▶ 다섯째, “조합원에 의한 통제를 보장하는 믿을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한다.”
조합원에 의한 기금 조성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모델에 적절한 회계 표준을 주장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협동조합 자본의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확장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협동조합의 역할

- 자유시장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기업이 이윤 추구 활동을 넘어 ‘사회’, ‘환경’,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2008년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자본주의는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마이클 포터는 기업의 사회참여를 비즈니스의 잠재적 기회로 인식하고 기업만이 아닌 지역주민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공유가치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함.
- . 이런 가운데 협동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와 같은 가치 지향형 대안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관련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201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000여 개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풀무원, 홈플러스, 오뚜기 등 식품기업을 포함해 약 90개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사회적 책임은 기업뿐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의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음
- . 한편, 2010년 제정된 ISO26000 표준은 기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포함해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국제적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으로, 전 세계 1만 개 단체가 적용하고 있음.

- .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을 포함한 정부와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조직의 사회적 책임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사회적 책임의 주체도 해당 조직은 물론 하청업체나 지부 등 공급사슬과 조직 활동의 영향을 받는 곳까지 넓게 확대함.
- . 유럽, 남아공, 브라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있음. 스웨덴과 영국은 정부 내 CSR 업무 담당 부서를 두었고, 중국에선 시진핑 시대를 맞아 CSR 장려 및 규제 부서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 최근 서울시에서도 2013년 상반기 안으로 서울형 지표를 개발하여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자체 지표를 개발할 계획임.
- . 국내에서도 ISO26000 표준을 포함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일부 NGO와 노조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이미지 제고, 가치 상승, 내부구성원 만족도 상승 등)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조직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견인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사회적 책임 활동은 협동조합의 근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 최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발표한 '협동조합의 향후 10년을 위한 청사진'에서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리더로 인정받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음.
- . 유럽소비자협동조합(Eurocoop)은 "사회적 책임은 협동조합의 DNA 안에 있다", "협동적 사업체에서 사회적 책임의 관점은 그들의 가치와 원칙으로부터 나타나는 자발적이고 본성적인 기능"이라고 밝히고 있음.
- . 유럽과 북미, 아시아의 많은 협동조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차보고서를 통해 사회 책임 활동을 소개해 왔으며, 점차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양식과 ISO26000 표준을 활용하는 협동조합들이 늘어나고 있음.
- .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및 역할에 있어 기업과 협동조합 간에는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 . 유럽소비자협동조합은 2008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사업 영역"이지만, "소비자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그들의 본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 .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은 CEO의 필요와 열망에 부응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에 부응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음.

-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부나 자선행사, 복지시설 지원과 같은 사회공헌 분야에 집중하지만, 협동조합은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전일적(holistic)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한 협동조합의 과제

-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통해서 그동안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세계인들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양극화와 고용 및 복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협동조합이 펼치는 공익적 사회실천 활동 못지않게 협동의 가치로 조직을 구성,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 역할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함.
- 협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데 있어 지표 개발을 통해 활동 전반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담아 조합원 및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살림의 경우 사업과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협동운동 조직으로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목표 가치에 대한 실현 정도와 성과 및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위한 조직적 노력과 성과를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에너지 전환 노력과 협동조합의 참여

-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세움**
 -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이던 원전 17기 가운데 8기를 폐쇄시켰으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늘릴 계획을 세움.
 - 전체 전력 생산 중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은 2010년 22.4%에서 2011년 17.7%로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16.4%에서 19.9%로 증가하였음.
- **원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담과 함께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높은 편임**
 - 독일 경제연구소(DIW)는 원전을 폐쇄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 향후 10년간 2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함. 이는 각 가정당 월 10유로 정도 전기요금을 추

가 부담하는 수준임.

- 이미 2011년 3월부터 2년 사이에 월 3~5유로 가량 전기요금이 증가했으며, 전력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인원 감축과 사업성 하락을 우려해 불만들이 나오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후쿠시마 사고 후 국민들의 원전 반대 여론은 지난 2012년 9월 조사에서도 74%로 나타날 만큼 여전히 높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동으로 원전 폐쇄를 지지하고 있음.

- 일반 시민들이 '프로슈머'로 참여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 독일 재생에너지 시설의 51%를 일반 시민과 농부가 소유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소유도 늘어나, 2009년 대비 2011년에 에너지협동조합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함.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시민은 8만 명 이상이며 약 8억 유로를 협동조합에 투자하고 있음.

<연도별 에너지협동조합의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에너지 협동조합수	66	70	77	101	247	586

출처: www.energytransition.de

- 에너지 생산에서 공동소유 형태가 증가한 데는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s)⁵⁾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낭비현상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에너지협동조합은 소수 전력회사에 독점된 에너지 공급을 민주화시킬 뿐 아니라, 집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Germany's Solar Industry Association의 대표)
- 국내에서도 작년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이후 에너지협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폐지한 발전차액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더 많은 햇빛발전협동조합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5) 전력회사가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 잉여 전력을 일반 전력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

● '팔불출'에서 '요남자'(요리하는 남자)로 변신하는 남성들

- 남자들의 요리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TV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 셀러브리티', '일밤-아빠 어디가', '해피투게더 3-야간매점' 등을 통해 남성 스타들의 요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
- 지난해 현대백화점의 요리 수업에 남성 수강생이 전체의 24%를 차지해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과천시, 울산 동구, 광주 남구, 부산 사하구청 등 지자체와 복지관, YWCA, 농업기술센터, 식품업체 등에서도 남성 요리교실이 꾸준히 개최되고 있음.
- 요리하는 남자를 일컫는 '요남자', '쿡남', '쿠킹파파'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고, '골드미스터가 간다', '가장(家長) 맛있는 요리교실' 등 남성을 겨냥한 흥미로운 요리교실 이름들도 등장하고 있음.

-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남성들은 주로 은퇴자들인 것으로 확인

- 경제 위기와 사회 변동으로 남성 홀벌이 4인 가구는 줄어드는 대신 부부 맞벌이와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산업화 시대에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에서 남성들의 가족 내 위상이 추락하고, 가족 내 대화에서도 배제되는 현상이 최근의 사회 이슈로 등장함.
- 한편, 전통적인 남성의 권위와 역할의 변화와 함께 대안으로 '부성애'와 '가사 참여'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 '딸 바보', '스칸디 대디'같은 말이 유행하고 '부드러운 아빠', '천사 아빠'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요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음.
- 특히 노인 남성들의 요리 참여는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음. 황혼 이혼 5건 중 4건이 여성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하루 세 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삼식이'가 황혼 이혼 1호감이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노인 남성들의 위기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결국 평균 수명 증가와 핵가족화로 홀로 사는 남성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요리 및 가사 능력은 '생존'의 측면에서 필요 요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

- 요리시간 2분과 2천원의 가격으로 요리에 도전하는 20~30대 젊은 독신남의 증가

- 2004년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요리 관련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남성의 참여가 높아짐. 특히 자취하는 남성들이 요리에 관심을 가지며 '나몰이네'(www.namool.com)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히 요리하는 웹사이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함.

- . 최근에는 인기 연예인들이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2분이면 되는 초간단 요리법'이나 '냄비 하나로 하는 요리책'처럼 쉬운 요리법이 인기를 얻고 있음.
- . 월간지 '이밥차'(www.2bab.co.kr)는 카카오톡으로 120만 명이 넘는 회원에게 단돈 2천원으로 10분 이내에 밥상을 차리는 레시피를 전달하고 있음. 이 중 남성 회원이 2011년 4만 명에서 2013년 17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 . 젊은 세대의 고학력화와 취업 준비 기간 증가로 남성 초혼 평균 나이가 32세로 높아지면서 혼자 사는 기간이 늘어남. 이에 따라 '생존'을 위한 간단한 요리에서부터 '건강'을 고려한 요리까지 남성들의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또한 이물질이나 벤조피렌 검출 등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가공식품 문제와 높은 외식비 부담, 조미료 일색의 식당밥에 대한 반감 등으로 '집밥'을 선호하는 현상도 남성들의 요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음.

- 요리하는 남성의 증가는 관련 업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

- . '식재료 사는 남성, 컴퓨터 사는 여성'으로 대표되는 '크로스 소비'가 등장하고 있음.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각종 식품과 생필품 매출의 49%가 남성(전년 40%)이고 이들의 즉석 반찬류 매출은 150% 증가함.
- . LG 전자가 주최한 '예랑의 자격'은 예비 신랑이 요리를 배우고 예비 신부가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18쌍 모집에 2000쌍이 신청하였으며, 교보서점에서는 최근 3년간 요리책 판매량이 2배 이상 늘고, 구매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인 것으로 확인.
- . 이런 추세에 맞춰서 1인 가구를 겨냥한 대형마트의 식재료 소포장과 가전 및 조리 도구의 소형화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 . 현대백화점은 요리교실 시간대를 평일 오후 7~9시로 변경하고, '아빠랑 함께 하는 쿠킹타임'과 같이 요리 강좌 주제와 내용에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요리에 관심 갖기 시작한 남성들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한 준비와 대응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 젊은층과 노년층의 남성 독신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분담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점차 높아질 전망임.
- . 따라서 남성들의 요리 참여를 단순한 생존 기술 습득의 차원을 넘어서 건강과 소통, 치유로서 역할은 물론,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참여로까지 남성의 역할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먹거리 운동을 하는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단체들도 젊은층과 노년층 남성들을 위한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음.

분야별 동향 3

사회 · 환경

● 물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상업화 논리와 대안 모색의 필요성

-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공공성' 문제를 돌아봄

-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3년 UN이 제정, 선포한 이래 매년 세계 각국에서 관련 행사를 열어옴. 올해 2013년은 21회째로 UN이 정한 '세계 물 협력의 해'이기도 함.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인구가 최소 11억 명이고, 오염된 식수로 매년 50만 명이 사망하고 있음. 수질오염이나 수자원 관리 미흡으로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있어 '물 기본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임.
- 우리나라는 올해 물의 날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물 관리 정책의 중점을 '물 복지'에 두고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과 수질 검사 강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 또한 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물 전문 기업과 연구소를 모아 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연구개발부터 실용화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놓음.
- 하지만 예전에도 이미 비슷한 계획을 세운 바 있어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음.

- 생수 시장의 확대 속에서 '생협 생수'도 등장함

- 올해 1월부터 생수의 지상파 TV 광고가 전면 허용됨. 그동안은 생수의 TV 광고 허용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상파 TV 광고를 금지해 왔음. 그런데 지난해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중 TV광고 불허조항이 삭제되어 올해부터 광고가 가능해짐.
- 이미 롯데칠성음료의 '백두산하늘샘', 농심의 '백산수' 등 생수 광고가 시작되었으며, 타 업체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생수 광고 시장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2007년 3,900억 원에서 매년 높은 성장을 거듭해 업계 추산 2012년 6,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됨.
- 생수 판매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함께 생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따라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둘러싼 문제 제기과 갈등

도 끊이지 않았음. 특히 화산섬인 제주도에서는 민간기업의 먹는 샘물 생산과 지하수 고갈 문제가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로 작용해 왔음.

- .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생협에서도 지난 2월 말부터 생수를 자체 물품으로 정식 출하하면서 식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회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섬.
- . 하지만 생수의 상업화를 통한 판매 행위는 미래세대와 함께 사용해야 할 공공재인 지하수 자원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 등 페트병의 안전성 문제와 폐기물 문제 등 많은 논란거리들을 안고 있음.
- . 물의 상품화와 생수 시장의 경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이때, 한국과 일본의 대표 생협들이 초창기에 조합원들과 함께 합성세제를 줄이고 재생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생활 속 환경실천 활동을 통해 물을 살리고자 했던 경험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 . 한살림은 수돗물불소화반대 운동의 경험에서처럼 시민들 다수가 사용하는 식수로서 수돗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생명의 먹거리가 생산되는 생산지 농업용수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들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임.

- 물 이용의 새로운 대안으로 '빗물 자원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제주에서는 최근 빗물이용시설 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함. 이는 비닐하우스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 저수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음. 2012년에 농가 294곳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지하수 이용량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전남 신안군 기도에서는 빗물 저장시설을 활용한 물 자급률 100% 달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임. 깨끗하고 경제적인 식수 공급이 절실한 섬의 상황에서, 빗물 이용은 기존의 해수담수화 시설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저렴할 뿐 아니라 수질과 수량,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대안으로 주목됨.

●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주는 불안감과 시민들의 대응 노력

- 원전 확대로 가는 정부정책과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불안감

- .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모두 11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국내 가동원전은 현재 23기에서 34기로 늘어나게 됨. 이 경우 국내 원전밀집도(단위면적당 원전설비용량)는 365kw로 프랑스(103kw)의 3.5배, 일본(177kw)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이런 가운데 국내 핵연료봉 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주요 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고리 5호기는 2016년, 월성·영광·울진 원전은 2021년까지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대책 추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기본계획 일정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 건설의 경험으로 볼 때 새로운 저장시설을 만드는 데에 적잖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여기에서다 박근혜 정부는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격하시킴으로써 탈핵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민들이 직접 방사능 감시활동에서 나서기 시작

-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직접 참여 욕구들을 반영하여 방사능 오염을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 되고 있음.
-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단체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가 공동 참여하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준비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발족할 예정임.
- 센터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방사능핵종분석시스템을 설치하여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과 독일 방사선방호협회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으로 시민들에게 방사능오염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임.
-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원전 및 방사능 관련 정보가 갈수록 필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사태 2주기를 맞아 원전 관련 도서들이 다양하게 출간됨.

<3월 한 달간 원전 관련 도서의 출간 동향>

제목	저자/역자	출판사
일본 원자력정책의 실패 :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과정의 검증과 안전규제에 대한 제언	마쓰오카 순지 / 김영근	고려대학교출판부
체르노빌의 봄	엠마뉴엘 르파주 / 해바라기프로젝트	이미지프레이밍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 죽음의 땅 일본원전사고 20킬로미터 이내의 기록	오오타 야스스케 / 하상련	책공장더불어
후쿠시마 이후의 삶 : 역사, 철학, 예술로서 3.11 이후를 성찰하다	서경식, 다카하시 데쓰야, 한홍구 / 이령경	반비
원전의 재앙 속에서 살다	사사키 다카시 / 형진의	둘베개
후쿠시마Q&A (2012, 2쇄) : 핵발전과 방사능	고이테 히로아키 / 고노 다이스케	무명인

● 탈핵 사회를 향한 에너지 전환 노력들

-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 시민이 전력생산자이자 주주로 나서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는 시민햇빛발전소 설립이 확산되고 있음.
- 서울 강북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올 4월에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 20킬로와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임. 학교에 처음 시민출자형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 12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거둔 수익은 햇빛발전소 확대와 학교 장학금 등 지역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임.
- 대구시는 시민출자자의 출자금을 모금해 시민햇빛발전소 3호기(연간 62만500kwh)를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함.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운동으로 2009년 건립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는 연간 3만8040kwh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모금 참여로 세워진 2호기는 연간 6205kwh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옥상 대부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임대료로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고 환경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주민참여 형태로 설립된 시민햇빛발전소는 전국 15곳으로, 대부분 협동조합 또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전국 시민햇빛발전 추진 현황>⁶⁾

이름	형식	발전용량	기타
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서울노원햇빛바람발전소			
서울금천햇빛발전소			
서울 종로구	협동조합		
경기도 시흥시민햇빛발전소	주식회사	30kw	가동중
경기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협동조합	30kw	1호기 협약
경기도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협동조합	100kw	주진위 창립
경기도 고양시민햇빛발전소	주식회사	31.5kw	법인 설립
경기도 부천햇빛발전소협동조합(예정)	협동조합	50kw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협동조합	50kw	3월 경남도와 업무협약 추진중
인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협동조합	2kw	조합원 모집중
대구시민햇빛발전소	주식회사	35kw	

6) 한겨레, 2013. 3.17

- 일본은 그린코프가 이토시마 시에 시민발전소(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10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음. 그린코프의 시민발전사업은 (사)그린시민전력(시민이 만들어내는 연대에 의한 발전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에 설립)이 담당하며, 이토시마 시의 협력을 얻어 태양광 발전소(약 1메가와트)를 이토시마 시 신자이지 지구에 건설하기로 함. 약 2만㎡의 부지에 태양광 패널 4,228장을 설치해 일반 가정 약 280세대 분을 충당하는 발전량을 생산할 계획임.

- 탈원전 실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들

- 서울시는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해 온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지난 1년간의 의미와 추진성과 등을 살펴보는 간담회를 가짐.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충 등으로 저탄소청정도시를 만들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줄이고자 도입된 이 정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추진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관련해서 서울시는 중소 태양광 업체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할 예정임. 국가 차원에서 폐지된 제도를 지자체에서 재도입하는 사례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대형 태양광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만큼 소형 태양광발전의 확대보급을 위해 50kw 이하의 일정 규모로 지원 대상을 제한할 방침임.

-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는 적정기술

- 지난 2월 초, 전북 완주군에서 로컬에너지 한마당(나는 난로다)이 열림.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지역에너지자립적정기술협동조합(준)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는 올해 2회째로, 석유, 전기, 가스에 의존하는 고비용 난방기술에서 벗어나 적정기술을 활용해 난방을 비롯한 에너지의 자립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슈마허의 중간기술 개념을 바탕으로 나온 적정기술은 지역 차원의 환경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관점과 방법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은 주로 저개발국가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에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탈핵과 에너지 자립을 통한 사회전환의 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적정기술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지역자립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올해 가을 담양 슬로시티에서 3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 한살림제주에서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에너지적정기술을 주제로 한 강좌를 진행할 예정임. 지난해 적정기술을 이용해 대안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삶을 생각해보는 취지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강정평화상단과 함께 강좌, 워크숍 등의 적정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였으며, 올해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대안에너지 관련 논의가 대부분 하이테크 위주이고 개개인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음. 한살림제주는 이후 지역에서 가칭 '적정기술에너지사업자협동조합' 등 적정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모태가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하며, 전국 단위에서 준비되고 있는 적정기술 네트워크와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흐름과도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음.

<지역별 적정기술네트워크>⁷⁾

시도	시군	단체	주아이템	향후계획
전남	나주	환경농업교육관	수소자동차	페시브공방 기획중
	장흥	흙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	난로, 벽난로, 화덕 및 적정 기술 전반	교육연구협동조합
	장평	흙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	화덕, 난로, 벽난로	
	완주	불노리영농조합법인	난로, 화덕, 벽난로	생산자협동조합
전북	부안	시민발전소	유채, 태양광발전, 지역운동	협동조합
	임실			재생가능에너지 교육 센터
	남원	지리산 초록배움터		
경남	통영, 거제		태양전지, 풍력발전	
	산청	대안기술센터	태양열조리기, 바이오가스, 풍력 등	교육장 완공, 교사교육
	밀양	흙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	벽난로 시공, 전국구, 교육 가능	벽난로연구회/생산협동조합
경북	봉화	적정기술센터	햇빛온풍기, 온수기, 발전기	교육장 짓는 중
	울산	흙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	난로, 보일러, 용접의 달인	진솔공방/생산협동조합
충남	홍성	귀농운동본부 적정기술교육	농촌생활기술	적정기술학교
	공주		생태건축, 생태단열	교육장 짓는 중
	천안	초록공방/진보신당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협동조합/공방
서울	종로	숲과에너지	바이오매스, 자전거발전기	사찰에너지전환, 소수력기획중
	영등포	하자작업장학교	난로, 벽난로	적정기술청년장인학교/공방
	은평		주택단열, 태양광발전, 난로 준비중	
경기	부천	에너지팜	풍력발전 등	
강원	원주	노나메기	사회적기업 운영 중	난로, 생태건축, 화덕 등
	화천	화천귀농학교		적정기술공방

7) 녹색당 풀뿌리정치워크숍 - 탈핵지역에너지 정책

분야별 동향 4

정치·사회운동

● '안보불감증'에서 '평화감수성'으로

- 한반도 전쟁위기는 거품인가?

- . 올해는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임. 정전협정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며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협정으로, 이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전쟁행위를 중단해 왔음.
- . 그런데 이 정전협정문에는 중국, 북한, 미국이 서명했고,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에서 빠져 있음. 그리고 아직도 한반도 내의 전시작전권이 한국정부에게 있지 않음. 노무현 정부 때 협상을 거쳐 2015년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이지만,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준비가 없으면 이양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 이 와중에 지난 3월 14일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밝힘.
- . 이에 한미 양국은 “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상태임.
- .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계속되어온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 깊어지고 있음.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사실상 조선정전협정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해온 미국의 체계적인 파괴행위와 그를 비호·두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한 처사로 이미 백지화되고도 남은 상태였다”고 비난함. 이어 한국과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자 군사도발행위로 규정하며 전쟁불사를 주장하고 있음.
- . 북한은 최고사령부 대변인을 통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대로’ 타격을 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음. 이에 미국 하원은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음.
- . 최근 북한은 ‘평양 주재 외국 공관 직원들의 철수 권고’와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 무력도발의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적

인 삶에는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 포털 업체의 검색어 1위는 화장품 업체의 50% 할인 소식이었음. 아산정책연구원이 3차 핵실험 이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불안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35.7%였음. 결국 '안보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안보불감증에서 평화감수성으로

- . 지금 북한은 연일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한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북정책 기조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결국 남북 상호간에 대화와 양보, 타협 보다는 서로가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자신의 논리로 길들이려는 데 치중해서 양측 간에 갈등과 긴장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 이런 가운데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막연한 낙관론은 물론이고 지나친 불안감이나 무관심 또한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음. 정치와 이념의 논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평화적인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 따라서 남북간 긴장 상태에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안보불감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동안 '안보불감증' 담론은 정권 연장이나 여론 전환용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이 말 속에는 국방이나 안보를 정부 고유의 권한 영역으로 놓고 시민들은 수동적 대상자로 위치 지우는 문제가 있음.
- . 관련해서 9.11 테러 당시 미국정부가 실질적인 안보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무능했는가를 밝힌 레베카 솔닛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큼. 그는 이 책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만든 애국법이 외부는 물론 내부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 결국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안보불감증을 문제로 삼기에 앞서서 시민들의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함.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야말로 적대적 대결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내는 핵심이라 할 수 있음. 나아가 평화감수성이야말로 해당 사회의 안전과 안보를 다지는 기초가 될 것임.
- . 평화감수성은 국가의 경계로 갇히지 않는 감수성을 일깨우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적대나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각하는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음. 폭력적 수단은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특히 남북한의 무력충돌은 세계 문명사에서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각계 영역들의 보다 적극적인 발언과 소통, 연대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제2의 새마을운동과 협동조합의 관제화 또는 정치화에 대한 우려

- 협동조합운동은 제2의 새마을운동?

- .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창조 경제'와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 . 2013년 2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 18차 간사단 회의에서 안상훈 고용복지분과위원은 실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를 시장경제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경제까지 개념을 확장시"키자고 제안하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주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두 번째 새마을운동'을 제안"한다고 주장함.
- . 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공동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인수위 관계자는 읍면동 조직을 갖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이 운동의 확대를 맡을 수 있도록 중앙회의 위상과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함.
- . 하지만 협동조합을 새마을운동과 연결시키는 인식과 접근 방식은, 과거 개발국가 시절 관 주도형 새마을운동이 그러했듯이, 자칫 자율, 자립, 자치에 바탕한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관제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함.

- 한국협동조합연대의 출범과 협동조합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 . 지난 1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협동조합연대' 창립총회가 열림. 한국협동조합연대는 앞으로 협동조합 운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아이템 개발, 창립지원 컨설팅, 교육 및 운영 지원 등 협동조합을 위한 민간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힘.
- . 이날 행사에서 박계동 사무총장(前 국회 사무총장)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 협동조합의 정신이 살아있으며, 두레는 대표적인 예로서 "보릿고개를 넘고 새마을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의 에너지 원천"이라고 말함.
- . 이처럼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나, 한국협동조합연대 관련자의 발언은 모처럼 대안적 모델로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협동조합을 자칫 이념화 된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음.
- . 2013년 3월 9일,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협동조합들은 좌파 세력들이 선거 목적으로 장악해 조직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협동조합을 정치적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
- . 임헌조 이사가 한국협동조합연대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국민들 다수의 무지에 기반한 좌파들의 음모로 돌리는 것은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으로, 한국협동조합연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뉴라이트 전국연합 경력자와 보수 성향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한국협동조합연대가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는 길은 정치나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지역과 생활현장에서 삶의 필요들을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질 것임.

● 내가 사는 곳은 어디인가? 행정구역개편과 지역주권

-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시도들

- 이명박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공식 의제로 만든 시기는 2009년 8월이지만 그와 관련된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됨. 그리고 현재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지방자치구조를 실제 인구 규모와 생활권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전부터 있었음.
- 이명박 정부는 이런 논의를 받아들여 2009년 국회 특위를 만들고,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이후 이 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신설되어 2012년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지만 시기가 늦춰져 2013년 5월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임.
-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흐름에 다소 냉소적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행정구역이 조정될 경우 자신들의 관할 지역이 사라지고 선거구가 변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그래서 1994년에도 시·군 경계를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일례로 생활권이 괴산군 청천면에 속한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부 마을을 괴산군에 편입하려하자 경상북도가 반발하기도 했음.
-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도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편의, 국가 경쟁력, 지역의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음.

- 행정구역개편의 명분 속에 가려진 지방자치 퇴보의 우려

-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자치구 의회 폐지론이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http://www.clar.go.kr/>)가 2013년 2월에 발표한 자료집을 보면,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지방분권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둘 중 하나를 임명제로 바꾸거나 폐지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음.

- 그런데 추진위의 안을 보면,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 직선, 의회 미구성'에 방점을 두고 '의회 구성, 구청장 임명', 현행 유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즉 구청장 직선제나 지방의회 구성 중 어느 하나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구청장 직선제나 구의회 구성 둘 중 하나가 폐지됨.
- 그리고 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이 1순위이고, 2순위가 특별시처럼 구청장·군수 직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담고 있음.
- 또한 주민자치회 모델은 읍·면·동에 주민대표들의 의결기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존의 동사무소를 통합한다는 방안일 뿐이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도 예산의 이관과 권한 부여 정도이지 주민들이 경찰의 장을 선출하는 방안이 아님.
- 결국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행정구역개편의 실제 내용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전으로 시대를 되돌리겠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마치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유보시킬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음.

- 지방자치를 넘어 지역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들

-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함.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은 작년 말 한 보고서를 통해⁸⁾ 중앙에 종속된 지방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해 보고서는 지역주민의 주권인식 회복을 위한 캠페인, 오·남용되고 있는 용어 바꾸기(예를 들어, 경기도지방공무원을 경기도 공무원으로), '지역화'와 '지역주권'에 대한 철학 공유, 지역교육을 통한 지역리더 양성과 지역공동체 복원, 법률과 제도 정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제안함.
-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는 진정한 자치 실현과 지역주권 회복을 위해 '중앙'과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지방' 대신 수평적인 뜻인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올해부터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벌이기 시작함.
- 또한 작년 11월 17일, 제 7회 지리산문화제 때 열린 지리산포럼에서는 지리산 자락 5개 시·군(구례, 남원, 하동, 함양, 산청)을 묶어 지리산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옴. 지리산과 관련된 각종 개발공약들을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막는 것이 어려운 만큼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자는 것임.
- 결국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체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 점에서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구역개편 관련 논의의 진행 과정과

8) 김승희·김진기·김주원, 2012, "지방자치에서 지역주권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제207호 (11. 27.)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추천제를 적용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녹색당 대의원대회 경험

-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가 아니라 '추천'이다?

- . 보통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에클레시아(ekklesia)라 불리던 민회의 민주주의로 알려져 있음.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들이 민회에 모여 도시의 중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했다는 점에서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얘기되고 있음. 하지만 추천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아테네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에서 선거가 아니라 추천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는 사실은 놓치고 있음.
- .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 모든 영역에 추천의 원리가 적용되어 30세 이상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죽기 전에 한번쯤 공직을 맡아야 했음.
 -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700명가량의 행정직 중 600명 정도가 제비뽑기(klēros) 방식으로 충원됨. 30세 이상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행정관에 지원할 수 있었고, 추천으로 선발된 사람이 1년 동안 행정직을 맡음.
 - 부울레(boule)라 불렸던 시민대표 평의회의 위원들 500명도 추천으로 임명됨. 30세 이상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임기를 맡음.
 - 헬리아스타이(hēliastai)라 불렸던 시민재판정은 매년 30세 이상의 지원자 중에서 6,000명을 추천으로 선발해 1년 동안 배심원직을 맡김.

- 한국정치 현실과 대의민주주의 대표성의 한계

- .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과 국회의 모습은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정치인 개인의 무능 못지않게 이들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즉 특정 직업군과 계급이 정치 영역에서 지나치게 많이 대변되거나 또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임.
- . 일례로 한국의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은 43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함. 한국 전체 국민 중 법조인 비율이 0.03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과잉 대변되는 직업군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 이와는 반대로, 국민들 생존 및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되는 '농업' 및 '환경' 관련 분야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중심 가치로 하는 현실 정치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정치적으로 외면받고 소홀히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 . 결국 새로운 안목과 가치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왜곡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

는 정치적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추천제 민주주의도 그 중 하나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녹색당 대의원대회의 추천제 민주주의 실험과 성과

- . '녹색당+'는 당 최고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임기는 1년) 전원을 추천으로 선출하였음. 과거 진보신당도 대의원을 추천했으나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녹색당의 새로운 정치실험이라 평가할 만함.
- . 구체적인 방식은 신청자 추천이 아닌 순수 추천으로 진행됨. 즉 당원 30명당 1명씩을 광역시·도별, 성별 및 연령 비율로 나누어 정원을 할당해 추천으로 선출함. 그리고 장애·이주·성소수자·청소년 등 소수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킴. 정해진 대의원 정원 3배수를 추천해 추천 순서에 따라 본인에게 확인해 대의원 여부를 결정함.
- . 녹색당은 대의원대회 행사의 모토를 '탄소제로'로 잡았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개인컵과 손수건을 가지고 오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임.
- . 실제로 이 모토에 따라 탄소제로로 대의원대회를 찾은 대의원이 88명. 총 140명 중 63%의 참석률을 기록함(대의원대회 정족수는 50%). 서울, 인천, 경기 등 가까운 지역 대의원의 참석률보다 먼 거리에 있는 지역 대의원의 참석률이 높았으며, 경남, 대전, 충북 지역과 소수자 할당인 청소년, 장애인 대의원은 100% 참석률을 기록함. 추천제가 책임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기우였다는 것이 확인됨.
- . 참석 대의원들은 의장과 부의장, 서기를 추천하거나 받았고, 추천된 사람들은 가위바위보로 당락을 결정. 이후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 동안 10개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가부를 의결함. 10명씩 모둠을 만들어 한 시간 동안 사전 토론을 함.
- . 대의원대회 결과,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부결되고 나머지는 통과됨.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제안이 부결되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음.
- . 대의원대회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참가자 후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을 준비해갔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손수건도 준비했다.(...) 지방 대의원들은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해 KTX가 아니라 무궁화(열차)를 이용했다.(...) 진지하고 진솔하며 꾸밈없는 이 건강한 토론을 어찌 중간에 포기할 수 있으랴. 추천제 대의원들은 의식 있고 개성 있는, 건강한 시민들이었다. 어디서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나타났나 싶다. 오랜만에 흥미롭고 내용 있는 회의에 참여하고 지치지만 행복하게 걷는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민주주의를 생활의 곳곳에서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간이었다."

● 인도의 총파업과 한국의 고공농성,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 못 살겠다 같아보자?

- . 간디의 나라로 익숙한 인도에서 총파업이 벌어짐. 지난 2013년 2월 20일부터 48 시간 동안 약 1억 명의 인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조치에 대해 총파업을 벌임. 인도 전체 인구 약 11억 명 중 1/10이 파업에 참여한 셈이어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중 하나로 평가됨.
- . 대체 누가 이런 거대한 파업을 이끌었을까? 인도에도 여러 노조연합체들이 있는데, 이번 파업에는 노동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석유, 은행, 보험, 통신, 광산, 운송, 보건, 농업 등 대다수 노동조합들이 힘을 합쳐 총파업에 나섰고, 이들과 함께 많은 지역의 시장, 상점, 관공서, 학교, 은행, 보험사들도 문을 닫고 파업에 동참함.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 차량이 불에 타거나 공장에 불이 나기도 함.
- . 성자의 이미지를 가진 나라 인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간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인도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주요한 산업을 국유화했고 협동조합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임(1904년 협동조합 신용회사법이 제정되고, 국가의 주요한 경제계획에도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정도임).
- . 그런데 1991년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도는 국제통화기금(IMF)에게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요당함. 인도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바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국영기업들을 매각했으며, 협동조합에게 저리의 자금을 제공했던 정책도 폐지하여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게 됨.
- .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 지금의 만모한 싱 총리임. 싱 총리의 구조조정으로 경제는 회생되는 듯 보였지만 사회양극화는 매우 심각해졌고, 인도 농가는 몰락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음. 그래서 지난해 2012년에도 외국유통자본이 51%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대형유통점의 설립 허가과 유류 가격 인상을 반대하면서 5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인 바 있음.

- 총파업은 성공했을까?

- . 이번 2013년의 총파업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루피)가치는 폭락하는 반면 기름·가스값이나 곡물·채소값은 엄청나게 뛰는 생활고 문제와 우량 공기기업의 민간기업으로의 매각 시도를 문제 삼았음.
- .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은 물가인상에 대한 통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조치 강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연금과 물가수당 지급 등 10가지 개혁조치를 정부에 제안함.

- . 하지만 인도정부가 총파업이 국가경제를 악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비난했고, 이 파업에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총파업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임.
- . 그래도 2014년에는 인도의 총선이 있음. 싱 총리는 이미 2012년 말에 총선에 대비해 젊은 층을 대폭 임용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고, 2013년 1월부터 주(州) 정부나 군청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빈민층 은행계좌에 직접 정부보조금을 입금해주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이미 선거준비를 하고 있는 셈임.
- . 이런 가운데 2012년 말, 인도 5대 공업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 구자라트 주의 총선에서 극우 성향인 제 1야당 인도국민당(BJP)의 모디가 3선 연임에 성공하며 2014년 선거를 노리고 있음. 구자라트 주의 선거에서 인도국민당은 전체 182석 중 115석을 차지해 여당인 국민회의당을 2배 이상 앞섬. 2014년 총선에서 BJP가 승리하면 구자라트가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커짐. 그리고 인도의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회 선거(연방하원 545석 중 가장 많은 80석 차지)서는 사회주의 정당인 사마지와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불가촉 천민을 대변하는 국민사회당이 2위, 여당인 국민회의당은 4위를 차지함.
- . 결국 심각한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입안했던 정권의 기반을 흔들고 있음. 그렇지만 그 대안이 극우성향의 정당으로 물리는 건 인도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그리고 공산당을 비롯한 인도의 기존 좌파들은 현정부와 비슷한 성장주도의 전략을 계획함으로써 차별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 . 인도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일까?
- . 전국의 장기파업 사업장을 살펴보면, 흥국생명과 코오롱 노조의 파업일은 이제 3,000일에 다가가고 있고, 영남대의료원과 콜트콜텍의 파업은 2,000일을 넘어섰으며, 재능교육 파업은 곧 2,000일을 넘김. 쌍용자동차, 쓰리엠, 유성기업 등 장기파업장들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해결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철탑에 올라간 최병승, 천의봉씨의 철탑투쟁은 160일을 넘어섬.
- . 인도의 총파업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엿볼 수 있을까? 인도처럼 한국도 일찍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경제는 성장하지만 사회양극화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모순이 불거지고 있음.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이런 흐름에 맞서기 위한 시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살 · 림 · 의 · 말

'성장'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 '경제 성장', '생협의 성장', '인류의 성장'을 생각하며 -

하나. 경제 성장: "GDP 독재에서 벗어나자!"

"이제 'GDP(국내총생산) 독재 시대'를 끝내자. 수치로 계량화되는 양적 성장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겨안을 수 있는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지난 3월 국내 유수의 한 신문사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전(前) 핀란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성장'이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 더 많이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에 의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 생산합니다. 그것의 총량을 이름 하여 '국내총생산(GDP)'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총생산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제로(0)'성장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성장이 높다 싶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양극화로 삼성이나 LG와 같은 1% 대기업과 이를 지탱하는 금융·법률·기술 전문가들만이 부(富)를 축적할 뿐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신문 기사를 보면 대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극심해 499개 상장사의 순이익 중 51%가 삼성과 현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상위 20개 사가 순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대 99'는 아닐망정 '10대 90'는 분명합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아베 정권이 등장하여 자국의 통화가치를 마구 떨어뜨리더니, 최근엔 통화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고 돈을 마구 찍어내 생산과 소비를 늘리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동안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일본경제를 다시 부풀리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풍선 부풀리기는 가능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이미 저성장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일시적인 경기침체, 혹은 경기순환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시장포화' 때문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소위 '지구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소비시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을 늘려도 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초대형빌딩과 4대강이 아

니면 한국의 GDP경제를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 용산개발이 좌초된 데서 보이듯이 이제는 그것조차도 어렵게 된 게 한국이 당면한 경제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GDP 독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산총량을 척도로 하는 경제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진즉부터 GDP를 대체한 새로운 지표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부탄의 '행복지수'나 세계은행에서 사용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진정한 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icator), '녹색국민총생산'(Green Net National Product) 등 적지 않은 대안적 경제사회지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웰빙 GDP'도 있습니다. 웰빙(Well-being) GDP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일명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 연구를 통해 제시한 대안지표입니다. 이 위원회는 GDP,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등 세 가지 주제로 기존의 GDP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GDP 독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표라는 것도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탄의 행복지수도 사실상 부탄 국민들 스스로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는 무엇일까? 아래로부터 공감하고 합의하여 함께 만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대안적 '경제사회지표'가 됩니다.(한살림 지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둘. 생협의 성장: "진화와 확산을 기대하며"

'성장' 이야기는 최근 생협계에서도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 생협, 성장신화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녹색평론에 기고한 박승욱 씨의 글과 논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협들은 최근 수년 사이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조합원 수와 공급액 외에 조합원 1인당 연간 이용액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살림이 739,685원, 아이쿱은 2,027,315원, 두레는 655,356원, 여성민우회 614,235원입니다. 아이쿱생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는 아이쿱생협이 채택하고 있는 조합비 제도 때문인데, 이용률과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장 수는 2012년 말 현재 한살림 152개소, 아이쿱 129개소, 두레 88개소, 여성민우회 20개소입니다.

한살림의 18%대 성장률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를 겪으면서 생협의 성장률이 정체되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일컬어지는 장기 저성장 흐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협 시장 자체가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생협의 사업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12/11)
조합 원수	한살림	170,793	207,053	242,916	293,442	346,500	19.3	18.1
	icoop	54,600 (34,987)	78,693 (56,100)	118,824 (85,116)	155,705 (109,753)	170,127 (129,850)	32.9 (38.8)	9.3 (18.3)
	두레	48,390	66,617	85,000	128,169	142,202	30.9	10.9
	여성 민우회	11,338	15,367	20,529	22,795	27,159	12.1	19.1
공급 액	한살림	133,437	159,438	190,940	226,228	256,301	17.7	13.3
	icoop	130,150	206,209	240,517	300,227	344,901	27.6	14.9
	두레	40,554	55,583	70,260	74,965	93,193	23.1	24.0
	여성 민우회	11,338	15,367	16,635	17,020	16,682	10.1	-2.0

한국 생협도 시장이 포화되기 전까지는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까지는 성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한국 생협은 지금 청소년기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구조적인 성장 정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의 생협의 독무대였던 유기농시장에 대기업을 비롯한 유통자본이 본격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로컬푸드 등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생협은 먹거리와 생활용품 시장에서 행정 지원을 받는 여타의 사회경제 부문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유통자본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와의 경쟁과 생협 간 경쟁이라는 이중 경쟁시스템 속에서 조만간 시장포화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생협들도 고도 성장기에서 저성장 체제로의 연착륙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대전략에서 확산전략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적 성장과 확산 전략이란 무엇일까?

첫째. 질적 성장이란 성숙을 의미합니다. 창조적 진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경제부총리도 직거래를 강조하는 가운데 기존의 관성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면모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직거래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차원변화가 필요합니다. 산업사회 이후의 대안적 협동조합의 길을 탐색하고, 인격과 영혼이 있는 직거래를 복원·발전시켜야 합니다. 한살림 안에는 이미 창조적 진화의 씨앗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둘째. 확대에서 확산으로 성장과 발전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확산(擴散)은 넓게

흘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밭에다 씨앗을 뿌리듯 말입니다.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활동/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집 분가하듯 한살림의 정신과 활동을 전국의 골목골목 마을 마을에 흘뿌리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셋. 인류의 성장: “한국의 ‘깨달음 세대’를 기다리며!”

“제 머리가 심장을 잡아먹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정말 가슴이 아리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유명 자립형 사립학교에서 전교 1등을 다룬다는 남학생이 또 목숨을 던졌습니다. 소년의 애달픈 목소리가 귀청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클지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의 죄도, 엄마의 잘못도 아닐 터인데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의 경쟁의 논리를 따져 탓할 일도 아닙니다.

구조적인 경제적 저성장 체제에 들어서 있는 일본에선 이른 ‘사토리(悟り) 세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토리’라는 말은 깨달음, 득도, 자각의 뜻을 가지고 있어 ‘깨달음세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토리 세대의 특징은 자가용, 고급 브랜드 옷, 음주, 여행을 금하고, 연애, 소비, 출세에도 소극적입니다. 이런 ‘초식(草食)계’ 젊은이가 늘어 하나의 세대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성장주의 언론은 이들의 소비 기피를 걱정합니다. 디플레이션, 즉 풍선 쪼그라뜨리기를 고착시킨다는 말입니다. 소비가 가장 왕성해야 할 젊은 층의 소비 절제가 내수 시장을 위축해 불황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30대 미만 독신 회사원의 자동차 보유율은 1999년 63.1%에서 2009년 49.6%로, 20대 해외여행자 수는 2000년 417만 명에서 지난해 294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인식과 진단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경제적 풍선 부풀리기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지구의 총생산과 총소비, 즉 물질적 부는 사춘기를 거치며 이제 다 커버린 청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경제는 이미 성인의 몸꼴을 갖추었습니다.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몸집을 키우기 위해(경제학자들은 이를 ‘경기 부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먹여봤자 배탈 아니면 비만일 뿐입니다. 이제 몸집을 키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난 20세 청년에게 ‘제로성장’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청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의 힘을 키우고, 생태적 감수성을 고양하며, 사회적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깨달음 세대는 어쩌면 진정한 신인류의 조상일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도 그러하거니와 산업주의 이후, 자본주의 이후의 삶의 양식의 원형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비가 날개를 펴득이며 비상하기 직전, 잠자는 듯 성찰하는 번데기 시절인 지도 모릅니다.

‘한살림의 성장’을 생각해봅니다. 25살이 넘은 한살림이 든직한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확대·확장할 곳도 적지 않습니다. 활력이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살림의 사업 및 활동과 더불어 ‘한살림 사람’을 성찰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살림 사람들의 ‘몸’, 한살림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한살림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한살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한살림 마음’은 무엇일까? 한살림 안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전일적인 ‘한국형 깨달음 세대’가 태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격월간 정세와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7호

책임편집/이슈진단 | 정규호

분야별동향 | 박지은 하만조 김현 하승우

살림의말 | 주요섭

펴낸날 2013년 4월 8일

펴낸이 박맹수

펴낸곳 모심과살림연구소

격월간 정세와 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7호